

KIEP 한중경제 포럼

KIEP Korea-China Economic Forum

제02-05호 / 2002년 5월 23일

중국의 經濟發展과 人權

마오위시(茅于軾)

北京天則經濟研究所 理事長

I. 발표 내용

1. 정치제도와 경제발전의 관계

□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경제발전에 유리한바,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민주정치를 실현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음.

- 그러나 인도, 필리핀 등은 민주국가이기는 하지만 경제수준이 많이 낙후되어 있음. 반면 영국의 식민지로서 엄격한 의미에서는 민주정치체제로 볼 수 없지만 1997년 이전의 홍콩은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음. 따라서 경제발전과 민주정치간에 필연적인 관계는 없다고도 할 수 있음.

□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면 평등하고 자발적인 교환은 부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촉진할 수 있음.

* KIEP 북경사무소에서는 중국경제 현안과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심층 파악하고, 정책 입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중국 관리 및 학자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한중경제포럼>을 운영, 매월 정기 세미나와 수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유관부처의 고위관리 및 전문가가 주제발표자로 참석하며, 한국측에서는 주중 한국 대사관 경제부문 인사, 한국경제단체 및 기업 대표들이 토론자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면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은 평등하고 자발적인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분배체제였음.
- 60년대 초반 중국에서는 2,000~3,000명이 기아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환시스템이 미비하였기 때문임.
- 현재 북한도 식량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평등하고 자발적인 교환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 평등하고 자발적인 교환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는 어느 한편의 손해 없이 쌍방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임. 이 경우 쌍방은 모두 교환을 통해 자신의 열세를 회피하고 비교우위를 실현할 수 있음.

- 중국은 개혁·개방 이전에는 개인의 이익을 완전히 부정하였으나 현재는 이를 인정하고 있음.
- 시장경제체제에서도 부도덕한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였기 때문임.

□ 평등한 교환을 위한 필수조건은 ‘특권’을 제거하는 것임. 특권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에 간섭하여 평등하고 자발적인 교환에 손해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음.

- 사회적 특권이 없다면 인권이 자동적으로 보장됨.
- 개혁·개방 이전 중국에는 특권이 성행하였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았음. “인민민주독재정치”라는 구호 밑에서 악인으로 낙인찍힌 사람은 사회적 폭력에 노출되었으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렀음. 당시 ‘인민’은 바로 특권계층이었음.

* 마오위시 교수는 1929년생으로, 상해교통대학 졸업. 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교수를 역임하였고 94년 민간경제연구소인 北京天則經濟研究所(Unirule Institute of Economics)를 설립, 현재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서방 미시경제학이론을 중국경제에 최초로 접목시켰으며, ADB 고문 및 China Economic Review의 편집고문을 겸직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인 원로 경제학자임.

2. 인권의 정의 및 특성

□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고 서로 상충되지 않는 권리임.

- 모든 사람이 평등하면 당연히 충분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을 것임. 한 사람이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그의 자유를 간섭하고 제한하기 때문임.
- 따라서 자유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임.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제약해서 남의 자유를 간섭하지 않아야 모든 사람이 자유를 향유할 수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유는 상품선택의 자유를 의미함. 시장에서 상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비교를 통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은 인권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함. 때문에 시장에서의 선택의 자유는 경제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선택의 자유는 평등에 기초한 것임. 평등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평등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음.
- 평등과 자유는 WTO의 기본 정신인바, WTO의 모든 규칙은 평등과 자유를 전제로 한 것임.
- 또한 평등과 자유가 경제발전을 견인한다는 면에서 인권은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임.

□ 인권은 생존권, 언론자유 등 이외 재산에 대한 소유권도 포함함.

-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경제행위자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임.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타인이 함부로 이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음. 따라서 재산의 소유권은

인권의 구성 요소이며 특권이 아님.

3. 중국의 인권, 경제발전 및 정치개혁

□ 문화혁명 기간에는 특권이 성행하였고 인권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음.

- 지난 20년의 개혁·개방으로 중국의 인권은 이전시기에 비해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였음.
- 현재에는 더 이상 ‘인민독재’를 빌미로 타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으며, 비록 헌법에는 무산계급독재통치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의미가 별로 없음.
- 문화혁명 시기에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였음. 마오쩌둥을 제외한 고위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바 정상적인 퇴직이 아닌 숙청을 통해 권력의 중심에서 축출되었음.
-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지도자의 정상적인 퇴직제도가 마련되었고, 비로소 고위 지도자들도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되었음.
- 이같은 지도자들의 인권 보장은 내부적인 비판을 가능케 하여 중국 정치의 발전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음.

□ 일반 국민의 인권도 과거에 비해 많이 신장되었음.

- 첫째,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어짐. 과거에는 개인은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개성을 발휘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으나 현재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므로 인적 자원의 활용에 매우 유리함.
- 둘째, 시장교환의 자유도 크게 확대됨. 과거에는 분배제도에 따라 생필품을 분배하였으나 이러한 시기는 이미 지나가고 소비에서의 민주화가 실현되었음.
- 셋째, 시장진입의 자유도 간과해서는 안됨. 개혁이전에는 사영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으나 현재에는 사영기업이 대부분의 산업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음.

□ 개혁·개방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이중제도(雙軌制)를 실시하였기 때문임.

- 이중제도는 타인의 효용이 손상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도 한 사람의 효용이 증가하는 ‘파레토’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
- 가격제도의 경우 가격을 변동시킬 경우 소비자나 생산자 중 어느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기존의 시장에서는 계획시스템을 유지하고 신규 시장에 대해서만 시장가격을 적용함으로써 파레토 개선을 발휘할 수 있었음.
- 이 밖에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와 미니버스 도입, 교육에 있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주식시장에서 국유주와 유통주 병존 등 이중제도를 통한 파레토 개선의 사례는 다양함.

- 그러나 현재는 시장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같은 이중제도를 하나도 통합하는 것이 당면과제임. 예를 들어 국유주 지분을 감소하고 유통주의 비중을 늘려야 함.

□ 정치개혁에 있어서는 법률체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 중국의 법규 중 대부분은 서방의 그것을 모방한 것인데 중국 실정에 잘 맞지 않음.

- 중국의 헌법은 최근의 개정에서 민주와 법치를 추가하였음. 중국은 UN 인권 서약에도 서명한 바 있음.

-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도 인쇄물을 통한 국가지도자의 비판은 쉽지 않지만 비공식적인 비판은 자유로움. 특히 인터넷의 출현은 언론의 자유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

- 중국의 정치·사회적인 안정이 금후 8~10년 지속될 수 있다면 경제개혁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회안정은 경제발전의 결정적인 요인임.

II. 토론요지

問: 향후 8~10년이 중국경제 발전의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근거는 무엇인가.

답: 불안정 요인으로서는 인권 보장 문제와 소득격차 확대를 들 수 있음. 인권보장 문제로는 정부에 의한 토지수용 등 국민의 인권 침해에 따른 불안요인을 들 수 있음. 또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3에서 0.4이상으로 높아지고 빈부격차도 심화되고 있음.

- 또한 중국의 WTO 가입은 경제구조와 이익 배분의 변화를 수반할 것인바, 특히 이익배분의 문제 표면화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
- 향후 8~10년간 사회안정이 지속된다면 경제규모는 두 배로 높아질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국민의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중등소득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사회혼란 요소가 많이 사라질 것임.

問: 한국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 자유와 민주에 대한 국민의 요구, 문민정부의 출범, 민주화의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을 수반했음. 중국도 경제발전이 일정 수준에 달하는 시점에서 민주화 요구가 제기될 것으로 보는가. 또한 그 시기는 발표자가 언급한 8~10년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가.

답: 중국에서는 민주화의 요구가 멈춘 적이 없었음. 개혁·개방 이후 대표적인 민주화 요구 사례로 1976년 북경 시단(西單)의 ‘민주의 벽’(주은래 추모의식이 민주화 요구로 확산) 사건과 1989년 천안문사태가 있었음.

- 민주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 쟁취하는 것인가 하는 것임.
- o 1980년대에는 일부인사들이 다당제나 공산당 통치 전복 등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특히 천안문사태 이후에는 해외 반체제 인사들이 이러한 요구를 많이 제기했음.

- 1992년 이후 개혁·개방의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개혁은 점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음.
- 중요한 것은 공산당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라는 것임. 지금까지의 개혁에서 착오도 발생하였지만 중국이 다른 체제전환국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의 집권능력이 성숙되었음을 반영함. 중국은 아직 공산당을 대체할 정치세력을 갖고 있지 못함.
- 장기적으로는 다당제가 출현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최소한 10년 이내에는 불가능할 것임. 공산당을 대체할 정당이 나타나더라도 집권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가 관리능력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공산당이 두개의 파벌로 나뉘어 상호견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실제로 중국공산당 내부에는 잠재적인 파벌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이 표면에 노출되지 않고 있을 뿐임.
- 예컨대 장쩌민과 리루이환은 많은 정책 사안에서 이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짐. 그러나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공산당이 두개 파벌로 당장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내 이견이 표면화 될 수 있는 분위기 성숙임.
- 현재 중국은 지도자의 개인적 카리스마에 의한 통치가 점차 약해지고 있어 자연스럽게 파벌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당내 파벌간 이견의 표면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는 정치발전의 연착륙을 실현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이는 위험을 수반하는 과정으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